



濁流清論

제51호 2017년 12월 11일(월)

발행인: 정 영 기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이메일(jy717@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	1
<u>특집</u> 학교 재정 문제에 대한 좌담회	3
<u>소통과 담론</u> 대학생활에 대한 단상	15
<u>교수들의 건강칼럼</u> 잠복결핵의 진단과 치료가 가지는 보건학적·사회적 의미	17
<u>소식</u> 교수회 제85, 86, 87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18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

미디어학과 최 정 주(연구정보처장 · 기획처장 겸임)

위기는 있고 위기감은 없다?

지난 2017년 10월 18일 율곡관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설명회가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 글은 2018학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교수님들께 별도로 소개해 드리는 목적과 더불어 우리 대학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수님들께서 의아해 하실만한 점은 왜 연구정보처장이 이런 글을 쓰느냐일 듯합니다. 현재 연구정보처장이 공식인 기획처장의 전결권지정자로서 기획처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처 예산팀 업무 파악에 부족함이 있어 이 글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제외한 대개의 경제 주체들이 그러하듯이 대학도 수입을 먼저 예측하고 이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다. 지출 후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을 하고, 지출을 위해서 모자라는 돈은 빌려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저축을 하는 상황을 굳이 희망으로 표현한다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은 위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계속 반복되면 결국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선명한 원칙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으나, 우리 대학의 현 상황은 수입을 늘리는 것도, 지출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 일종의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액은 지난 8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 정책에 따라서 2017학년도 추정 등록금 수입은 2010학년도 대비 20억 원 가까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부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과 대학의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 여부를 연계하였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여 수입을 늘리려는 의사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계속

최근에는 정부가 입학금의 80%를 향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감축하려는 정책의지를 드러내면서 우리 대학도 매년 2~3억 원, 궁극적으로 18억 원 수준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기부금 수입액도 2013년 46억 원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올해는 35억 원의 기부금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에서 비롯된 산학협력단전입금이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작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2018학년도부터 간접비 계상비율이 29.5%에서 21.84%로 낮아지면서 약 15억 원 수준의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2018학년도에는 2017학년도에 비해서 수입 측면에서 희망적인 부분이 없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출의 측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는 2017학년도에 2010학년도 대비 107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78명에 이르는 교원을 추가로 임용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이 교원 충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로는 정부의 대학교조개혁평가, 대교협의 기관인증평가, 중앙일보의 대학종합평가 등 우리 대학에 대한 대외 평가를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 대학이 그동안 최고의 가치로 여겨온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2018학년도에는 사회적 의제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가 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계연도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자금인 예비비가 2017학년도에 3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회계 규모에 비추어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가 없다는 점이 바로 우리 대학이 마주친 당장의 재정위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것입니다. 등록금 회계에서 교육용 건물의 건축과 유지를 위한 법적 건축기금 적립은 2014학년도를 정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17학년도에는 결국 건축기금을 적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재정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2018학년도에도 건축기금을 적립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요원한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표현하자면, 현 상황도 위기지만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력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입과 지출의 재정 요소들이 모두 나쁨대로의 당위성으로 뚝뚝 뚫려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본예산 편성의 어려움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본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선택적 지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 중에서 등록금 수입은 등록 재학생의 수와 관련된 문제로서 정원 규제를 받는 우리 대학은 정원의 학생,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늘리는 노력에 투자의 의미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유지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수학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생활/주거 공간에 대한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을 투입하려 합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부금 유치를 위한 우리 대학 자체의 투자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기부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내의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굴하여 소개하는 일을 지속하며 재정의 일정 부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의 수입 증대로 연결하기 위해서 성과가 필요한 연구 그룹과 성과가 현실화된 연구 그룹을 구분하여 연구비와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정부재정지원 규모는 이미 운영수입의 10%를 넘어서 추가적인 수입 증대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와 교비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합니다. 각종 재정사업을 재검토하여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중복 가능성이 높거나, 투자에 따른 교육 개선 효과가 낮은 사업들은 2019년 이후로 미루거나, 합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경우 폐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의 많은 구성원들은 이미 현재의 재정여건에 대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임금동결에 합의했습니다. 책임운영 부서인 특수대학원들은 운영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부속병원전입금을 통한 대학 재정 기여에 대한 이해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위기는 차가운 현실이지만, 위기감의 공유와 공감대 형성은 우리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건강한 현상입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의 이익 균형점을 찾는 행동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교내 소통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조언을 귀담아 들겠습니다.

특집

학교 재정 문제에 대한 좌담회

지난 11월 15일 오후 6시 중합관 12층 코너스톤에서 학교 재정 문제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좌담회에는 미디어학과 최정주(연구정보처장·기획처장 겸임), 물리학과 이순일, 화학과 윤호섭, 영어영문학과 한 호, 의학과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대중, 의학과 생화학교실 이재호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 교수님들의 공개된 토론의 마당입니다. 좌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다른 견해를 지닌 교수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편집책임 윤호섭, 이재호)

윤호섭(사회):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대학교에 상당한 재정위기가 있고, 제가 느끼기에 몇 년간 계속되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학기 초에 갑자기 단과대학 예산을 10% 삭감하는 사태까지 있었고,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현재 아주대학교 리더십이 부재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아주대학교 재정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보고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좌담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 현황 이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밝히고, 후반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벌어진 현황 및 문제점. 학교가 올바르게 대처를 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학교재정에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정주: 수입감소와 지출증가의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원의 4%를 감축하였고, 아시는 대로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도탈락률도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등록금 수입 결손이 올해 26억~27억 정도로 규모가 커진 상황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가장 큰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숫자가 안 늘어도 자

연히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직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원과 직원이 함께 늘어났는데 교원은 87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지출이 2010년에 비해서 107억 원 정도 추가로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이순일: 우리 학교 재정 상태를 보면 수입과 지출 양쪽에 모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줄어든 표면적 이유는 등록금 수입의 감소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경고를 2014년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등록금수입 결손액을 발표하였는데, 예정된 정원 감축 비율이 있어 어렵지 않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했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2억 원과 18억 원인 등록금수입 결손이 2022년에는 3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보직자들은 국고지원금 확보를 명분으로 입학정원 감축을 강행했습니다. 국고지원금으로 등록금수입 결손 충당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국고지원은 등록금수입과는 성격이 다르며 국고지원은 모두 한시 사업이라 안정적 대학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산학협력단 사업들은 당연히 대학 회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 특성화 같은 특수목적 사업을 위한 국고지원금의 경우에

는 오버헤드 부분만 등록금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0%의 오버헤드 비율을 가정할 때, 18억 원의 등록금수입 결손을 충당하려면 60억 원의 국고지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의 지속적 확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예견되는 문제들을 무시하고 입학정원 축소라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당장 해결책을 내놓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보직자들이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청회에서 내놓은 심각한 경고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이런 지경에 달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윤호섭: 당시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이순일: 그 당시 정원 감축 결정은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18억)과 ACE사업(23억) 지원을 명분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처럼 ACE와 CK-II 사업 지원은 한시적으로만 확보된 것으로, 나중에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또한 링크사업지원금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속한 것으로, 교비회계(대학 운영자금)와는 무관합니다.¹⁾

이재호: 당시에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정원조정을 시도하면서 국고지원금과 연계시켜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순일: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건대, 외대 등 많은 대학들이 정원 축소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같은 선택을 하지 못했는지 의아합니다. 장기적으로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국고사업 지원을 받으려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등록금 수입을 포기한 결정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 제안된 국고사업들은 모두 3년+2년의 한시적인 형태로, 2018년 내지 2020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정원감축을 강행하려면 닥쳐 올 수입 결손에 대해 미리 대비라도 해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더해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 및 유관 학과들은 혜택을 보았지만, 다른 학과들은 입학정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의 고통만 받은 것입니다. 지난 학기 학생 수

감소로 실현되지 않은 수입을 이유로 각 단과대학에 예산 일괄 삭감을 요구한 것과 더불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하는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학정원 축소의 영향 이상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학교의 재정수입이 정상적으로 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물가상승률만큼은 재정이 확충되어야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대학운영이 가능한데, 현재는 장기간에 걸친 등록금 동결의 여파로 수입이 충분히 늘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 이후의 외형적 재정수입 증가는 누적된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수차례 경고를 하였으나 아무런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했습니다. 대체 수입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몇 가지 모델도 제시하였으나,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입학정원 축소로 예상되던 것보다 더 많은 학생 수 감소가 나타난 것은 교육적인 측면의 문제를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이 경쟁력을 상실했기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2014~2015년 대학평의원회에서 이에 대해 경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유효한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수입 측면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재정수입 부족 상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뼈아픈 문제입니다.

이재호: 그 당시 공청회 사회를 봤는데 공청회 이후 교수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있었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진행했었던 것인가요?

이순일: 분회별 의견 수렴을 요청하기도 했고,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학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는 공론을 당시 안재환 총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본부의 입학정원 축소 강행 여부에 관한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당시 대학본부는 결국 일방통행을 한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 교수들은 정원 축소에 대해 일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본부에 강하게 대응할 정도로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학정원 감축이 교수들의 우호적 평가 하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호: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당시 교육부나 정부의 의지가 강하여 단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것 말고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연계시킬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순일: 그 당시 공청회의 발제자가 저와 김준한 교수였습니다. 김준한 교수께서 정책이란 것이 정부의 주장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정부가 바뀌면 정책은 뒤집어질 것이고, 그 전에도 무리하게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정원 감축이 야기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교수 사회가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윤호섭: 이순일 교수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위의 사항을 결정한 분들은 현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나 설명 가능한 분이 계실까요?

한호: 제가 2013~2014년 입학처장을 할 당시, 처장 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획처에서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 정서는 국가가 강하게 나오니 이 기조가 오래 갈 것 같고,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은 이전부터 국고사업신청을 하지 않았던 학교들이고 이에 대한 피해도 없을 것 같으니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우리 대학은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국대 이대 외대는 입학정원이 3000명 이상이나 우리는 2000명 정도입니다. 보통 대학이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발전하기 위한 적정규모로 3000명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아마 이 마지노선을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분위기를 보면 국가가 압박하는 것에 대해 굴복한 것이고 하지 않은 학교는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구조개혁평가가 있었는데 교육부가 지향하는 논조는 전체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기조로 갈 것이고 어차피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줄이게 될 것, 국가가 반대급부를 줄 때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기조가 몇 십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개인적으

로는 우리 학교는 더 줄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공계 특성화도 잘되어 있고 방만한 백화점식 운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전달했고 이에 본부에서도 최소로 줄이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들을 기획처에서 냈던 것 같습니다. 정원이 줄어들어 손실이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회의에서 공청회에서 지적했던 것에 대한 가능성을 몇 달 뒤 제기하여 뒤늦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ACE 사업에서 떨어졌을 때라 당장 20억 가량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자들이 예언을 했으나 우자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데 2014~2015년 초에 대책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기의식까지는 아니라도 대책은 있어야겠다고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 쪽을 자세히 모르지만 근근이 살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산의 지출구조와 수입구조 분석하여 면밀히 분석하면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태생적으로 입학정원 2000명인 이 정도 규모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순일: 정부의 의지를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단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원 축소를 결정했으면서도 추후에 생길 문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정량적 데이터를 보고 후속 대책을 세우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최정주: 그 당시 기획처 나름의 대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일: 제 기억에 사업발표가 2013년 가을에 있었고, 공청회는 2014년 5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재호: 2014년이라면 가을이 지나면서 차기 총장을 선임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가 전반적으로 바뀌어버렸다고 봅니다.

이순일: 그 당시, 리더십이 바뀌는 타이밍에 장기적 영향을 가져 올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순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출 측면에서 발견한 문제도 공청회에서 제시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테

이터를 보면 인건비 연간 인상률은 평균 3.22%입니다. 이를 가지고 추산해 보면 2024년까지 매년 20~27억 원 정도의 인건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지출 증가를 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감당할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무시되는 것이 물가상승률입니다. 교수 급여인상률도 물가상승률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된 명목 급여 인상률은 약 8%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의 누적 물가상승률은 대략 21%입니다. 물가가 21% 오르는데 급여는 8%만 인상되었다면, 실제적으로는 보수가 13%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등록금은 동결되고 수입결손을 충당할 새로운 수입원은 확보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수입 감소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대학운명을 맡은 사람들은 현재 및 미래 상황을 정량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호: 3년 전까지만 해도 교원의 수를 증가시켰는데, 이는 평가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인가요?

최정주: 제일 큰 이유는 구조개혁 평가를 위해서입니다. 교수를 충원하여 교육의 품질인 교원 충원률, 1인당 학생 수 등의 정량지표를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이런 지표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교수 충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었고 구조개혁평가나 외부평가에 대비해야한다는 측면으로 2가지를 고려하여 교원의 수를 늘린 것입니다.

한호: 일단은 교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일정기준을 넘어간 상황인가요?

최정주: 예산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일정기준을 넘긴 것은 아닙니다. 아직 2주기 편람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내년도 4월 1일까지 2주기 평가에 포함됩니다. 지난 1주기 평가 때 가지고 있었던 목표 중 하나는 수도권의 평균 정도는 가야하지 않을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호: 교육적으로 본다면, 다른 것을 희생한다고 해도 이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순일: 수입 측면에서 보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물가상승률을 따르지 못하는 수입 증가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등록금수입 결손이 20억 원 규모인데, 우리 대학의 재정에서 20억은 명암을 가르는 굉장히 치명적인 액수입니다. 매년 법인이 지불하지 않는 법정전입금의 규모도 공교롭게 18~20억 원 정도입니다. 재단은 본교 법정전입금의 55%만을 부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년 모자라는 20억 원 정도를 교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역대 총장들이 법인이 법정전입금 전체를 부담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았기에 부족분을 등록금 등의 교비 수입에서 내은 것입니다. 이는 대학재정에 부담을 주는 문제인데, 이를 대학본부가 인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호: 궁금한 것이 있는데, 타 대학의 법정전입금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김대중: 수치를 보면 법정전입금 부담은 아주대학교의 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이순일: 부담률이 대학전체로는 74%이나 이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본교만 놓고 보면 55% 정도입니다. 병원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법인이 가져가 이를 가지고 의대 및 병원의 법정전입금을 100% 처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본교 법정전입금은 55%만 법인이 내고 있습니다.

김대중: 20억 정도는 전체 교비예산에 얼마나 차지하나요?

이순일: 전체 교비예산에서 대략 1% 정도 차지합니다만, 교비회계에는 고정비 성격의 항목이 많아 20억 원 유무가 대학 운영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순일: 법정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아 이를 등록금수입에서 메꾸다보니 재정에 부담이 갑니다. 등록금회계 수입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우선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가지고 법정전입금을 충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등록금회계는 국고 지원금, 전입금, 기부금 등이 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당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이도 문제입니다. 다만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단이 법정전입금을 전부 낼 능력이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건축비가 100억여 원인데, 그간 교비로 대납한 법정전입금 부족분 누적액은 180억 원 정도입니다. 장례식장을 지은 후에는 장례식장 수입을 법인이 가져갑니다. 병원에는 1년에 얼마씩 준다고 정액으로 약속하였으나 학교에는 약속된 지급액이 전혀 없습니다. 장례식장 수입금으로 법정전입금 전액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돈이 없어서 법정전입금 일부를 못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익이 있는데도 안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정주: 재정의 위기를 수입, 지출 위기로 이순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수입을 법정전입금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전입금이 수입결손의 모든 것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실제로 단순명료하게 재단이 법정전입금을 내면 해결될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수입결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전입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총장을 비롯한 대학 경영자(보직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운형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서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를 소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문제는 평의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의문점을 제기한 사항으로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으며,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8 본예산 관련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호섭: 과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까?

이순일: 등록금과 비등록금 수입에서 검토가 필요한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등록금 수입부터 보면 독립운영부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운영부서가 만들어지고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오버헤드 비율이 적절한지, 비용에 대한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 학부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 외에 유일한 추가적인 등록금 수입은 특수대학원 수입입니다.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단과대학의 발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대학의 명성과 위상을 위해서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치 국세와 지방세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학교의 수입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번 교원 보수 2.5% 인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은 특수대학원의 자금 11억 5700만 원을 이월시키지 않고 다음 해 본예산에 포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체 재원이 없다면 독립운영부서의 수익을 대학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전체의 재정형편이 좋으면 모를까,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독립운영부서 관련 제반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주: 책임운영부서와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학교는 가난한데, 책임운영부서는 예산이 남아 이월한다는 것입니다. 현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구조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 제도를 도입할 때 책임운영부서를 운영하여 책임을 지고 손실 및 이익 측면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학부생 등록금 수입은 결손되고, 지출은 증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도입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시작했는데 이를 거두어들이고 제도를 다시 원상복귀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버헤드에 대해서는 오버헤드 계산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학교가 어려우니 이를 극복할 때까지 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책임운영부서들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과거 기준으로 볼 때 계속 양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를 손보거나 지금쯤 다시 생각해 보는 방법(오버헤드비율을 포함해서)은 이번 학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순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리더는 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밀어붙여야 하는지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순일: 적절하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억 정도의 금액을 본예산에 포함하여 보수를 인상한 것이 성공적인 예입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단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는 필요합니다. 오히려 대학 전체의 틀 안에서 생각한다면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주: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에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 협력하고 있어 학교 본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마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간접비라든지 이를 포함한 제도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필요합니다. 전임 총장들이 못했어도 차기 총장이 못한다는 법은 없으니 논의에 올릴 수 있다고 보며, 공론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순일: 그리고 독립운영부서의 수지 결산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민간에서 학원을 한다고 하면 임대료를 내고, 전기료를 포함한 여러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독립운영부서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수대학원은 많은 경우 학부 수업이 없을 때 동일 공간을 사용하지만, 어떤 사업들은 공간을 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사 공간을 외부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의 몇 배를 요구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을 연구·교육·행정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라지는 공간신축 수요의 절약 효과도 고려되어야 합니다.²⁾

한호: 제가 관련된 특수대학원이 한 군데밖에 없어 다른 특수대학원은 모르겠으나, 현재 점차 수요가 감소하여 지원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순일: 특수대학원들의 운영수지표를 보면 예전에는 잘 나가던 곳이 수입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최정주: 예를 들면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 수가 줄면 교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여파가 초등학교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사의 수가 줄어들면 교사에 대한 재교육 수요 또한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원은 자구 노력으로 새로운 교육 분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R이라든가 학생 상담 역할에 대한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수대학원 교육의 방향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예측하고 변화하면서 현재까지는 효율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수대학원 체제가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도로 유연한가의 문제를 보면, 내부의 인적 구성을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미래를 충분히 대비할 만큼 유연한가에 대해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순일: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999년에는 독립운영부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입 창출이 가능한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상황에

만족하고 발전 추구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성장목표를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동력이 필요한데, 독립운영부서가 된 이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을 18년간 운영하였으니, 적절한지 한번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윤호섭: 독립운영부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시겠어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순일: 등록금 외에 주의를 기울일 수입이 2 가지 더 있습니다. 기부금과 임대료 수입입니다. 우선 기부금의 경우,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총장이 올 때 새로운 기부금이 발굴되지만, 정작 총액을 보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심지어 줄기도 합니다.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총장마다 새로운 기부금을 창출한 부분이 있지만, 후임 총장이 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총장이 바뀔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총장이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후에 떠나고 나면, 해당 기부금이 끊어져 오히려 대학재정에 부담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호: 기부금과 관계하여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인프라는 무엇이 있나요?

최정주: 기획처 산하 대학발전팀이 있습니다. 일반직 2명 계약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일: 기부금 실적이 부진한 것이 대학발전팀 직원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는 총장의 문제입니다. 기부금을 새로 발굴하고 기존 기부금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 총장의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총장들이 무책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 신입 총장을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인데, 그 역량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호섭: 대학 총장의 가장 큰 임무는 기부금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조교를 시작할 때 간단한 만찬을 한 적이 있는데, 총장 옆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다고 인사말을 하니 총장 말씀이 많긴 한데 대부분 의전이고 총장은 일 년에 한두 개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으나 요즘 와서 생각해보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은 큰 일 한 두 개만 하고 대학은 주된 업무가 연구과 봉사 등인데 시스템만 갖춰두면

교수, 학생,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총장의 가장 큰 일은 대외 활동을 통한 기부금 조성인데 우리 학교의 전임 총장들은 주로 교내의 일에 집중했었지요.

한호: 우리 학교보다 작거나 비슷한 규모의 학교 사례를 보더라도 부총장에게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하고 총장은 기부금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총장보다는 내부에서 되는 분이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호섭: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호: 항상 이 문제를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면 비등록금 수입보다 등록금 수입 증가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비등록금은 불안하고 예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수입과 관련하여 재직자 전형을 만들었는데, 안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쪽으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의 리더십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일한다면 입장을 밝힐 때 구체적인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통하여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편한 방법으로만 늘리겠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순일: 하지만 재직자 전형도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못하면 아주 대학교의 학위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원이 엮여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아주대학교 입학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며 중국인 학생들을 모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칫 아주대가 일종의 학위 장사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직자 전형도 잘못하면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영학 학위를 준다면 정작 커리큘럼에는 경영학 교육을 위한 과목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면 아주대 경영학과 학생들이 받은 학사 학위의 가치가 훼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취지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비등록금 수입인 임대료 수입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산학협력관에 80평의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캠퍼스플라자 또한 2년 동안 120여

평이 공실상태였습니다. 대학이 임대수입을 위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별도로 한다면, 공실로 인한 기타 수입 미실현은 지적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적 공간에서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호섭: 그런 점은 분명합니다. 원천정보센터를 설치했으나 거의 쓰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일 보고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되는지 알 수 없는데 아마 대부분 교수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인 건물이라면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학교 자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일: 장기간 학교에 입주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관련해서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적절한 수준에서 계약 조건을 조정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해 본 적이 있는데, 별로 수익 면에서 살펴본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학 본부는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료원은 컨설팅으로 발전방향을 만들고 들여다보고하고 있는데.

최정주: 예전에 경영 컨설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이 수입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았으나,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실현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김대중: 기부금도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계약직이나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총장이 잠깐 장학금 제도도 만들고 했지만.

윤호섭: 기부금에 대해서도 동문과 학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문가들이 일을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섭: 이런 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학교를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여러 이벤트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가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대중 교수가 말한 것처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며 학교에 이런 전문가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한호: 가장 긍정적이고 교육철학을 해치지 않는 점에서 본다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중도탈락률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참 고맙다고 생각하면 기부도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주대학교의 브랜드 가치가 예전보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전 다산학부대학 학장을 했을 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와 다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신선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학년의 중도탈락률이 높아 1학년을 잡는 것이 각 대학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그들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정성을 교육의 건전성으로 보는 것이 제일 근원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누구나 신경써야 할 문제이나,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나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윤호섭: 그런 것도 있고, 교수님의 말씀은 좋지만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안과는 거리가 있는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 우리 학교는 굉장히 건전한 정책을 쓰는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는 싼 값에 비정년보장 교수를 대폭 채용한 다든지 노골적 학위장사를 한다든지 여러 불건전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길로 계속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1학년 탈락률이 높은 것이 교육의 문제인지, 학교 위상의 문제인지.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이 생각하는 아주대학교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는지 궁금합니다.

한호: 하지만 이를 조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나가는 학생

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대중: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일: 학생들이 떠났다는 게 하나의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섭: 학생들에게는 일단 인 서울이나 아니냐가 중요하겠지요. 아주대학교의 교육의 질이나 교수 등은 상당히 괜찮은데 서울에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금방 바뀔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호: 하지만 접근성은 나아졌습니다. 현재 입학자원의 70%가 수도권이고,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모르겠지만 입학처에서 분석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가는지는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최정주: 제일 갑작스럽게 변했을 때 물수능 해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이는 교육의 질이나 브랜드의 문제도 아니고, 학생들의 희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윤호섭: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좋은 교육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데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재정문제 방편의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 중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품질이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얼마나 만족하는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간과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최정주: ACE 사업이나 교수학습센터의 노력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교수의 입장에서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호: 그리고 식당, 기숙사, 도서관 리모델링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호: 이번에 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변화의 방향이 평생교육 체제로 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재직자 전형도 그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10~20년 뒤 재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새로운 교육 모형이 나올 것이며, 대학의 학위

개념 또한 기존의 가치 체계로 판단할 수 없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직자 전형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며, 학교가 감당할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을 평생교육의 고급스러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늘려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떠나서 대학의 발전 방향 중 하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의 경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H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이 많이 지원하여 이제 는 질 관리가 될 정도로 불합격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과연 교육을 잘 시키는가 어떤 학생이 오는가 이를 봐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히 외국학생들의 질이 낮을 것이라고 보지 말고 학교가 관리하여 엄격하게 시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 견해로는 그런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할 때 우려했던 점은 재직자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단지 학위를 받으러 오는 것인지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이었습니 다. 만약 단순히 학위가 목적이라면 엄격한 교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어디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학구열이 높은 이상적인 학생들인지, 아니면 간판만 필요로 하는 학생들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한호: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몇 년 간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대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점차 평생교육 체제로 가고 있고 이와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타 대학 교수가 아주대 학교가 사이버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고려했던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 한다고 대답했지만, 이 방향이 대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신입 총장이 오기 전에 설계라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꽤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문제가 상존하긴 하지만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재직자전형도 3~4년 이후 졸업생이 날 것이고 추후에 조사를 해보면 교육을 위해서 온 것인지 학위를 위해서 온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통대의 경우에는 학위가 있어도 다시 재입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대를 이러한

방통대를 모델로 하여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일: 이전에 한 특수대학원에서 사이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붐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프로그램의 투자 대비 수익이 정점에 이른 이후에 지속적인 수입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사이버프로그램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윤호섭: 언제까지 정부에서 대학에서 계속 등록금을 잡고 있을까요?

이순일: 대학에 대한 지원을 특정 사업들을 통해 하지 말고, 일반교부금 형태로 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대학 총장들이 나서서 이런 요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론도 조성해야 합니다.

윤호섭: 공무원 봉급도 오르는데 대학만큼 이런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호: 사회적으로 대학이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이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일: 등록금 동결에는 동의하지만, 일반교부금 형태의 국고지원이 없다면 이는 지속이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윤호섭: 우리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실험실습비가 10% 삭감되고 있고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호: 3년 전에 사립대학 총장들이 잘못 요구하여 이 사안이 신문에 부각되었습니다.

윤호섭: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과 관련하여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순일: 법정전입금과 관련하여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들이 잘 봐야하는 것은 부속병원 전출금의 흐름입니다. 이를 보면 법인을 거쳐 학교로 오는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자금을 두 가지 명목으로 써먹기도 합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교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송재관 운영비는 병원이 부담하고, 이에 더해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을 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억 5천만 원 정도가 교비회계에 추가적

으로 전입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이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속병원에서는 이런 명목으로 전출했지만, 이를 법인은 법정전입금으로 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양병원 건축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를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송재관 비용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합산하면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 법정전입금에도 넣고 경상비전입금으로도 계산했던 것입니다. 전출을 할 때도 법정전입금이나 경상비전입금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로 전입한 경상비전입금과 법정전입금을 구분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법정전입금만 있습니다. 예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각 항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예·결산 처리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호: 저는 의료원이 그간 본교에 지속적으로 매년 5억씩 기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일: 병원에서는 본교를 돕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해당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니다.

한호: 현재 요양병원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대중: 현재 요양병원을 짓고 있는데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나 실제 어떨지는 가변적입니다.

이순일: 법인이 수입이 있으면 법정부담금을 우선 내고, 남은 부분만을 투자를 위해 적립하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 벌면 법정부담금을 내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법인은 아마 한번에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면 투자여력이 없어서 나중에 돈을 벌어 들일만한 사업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법인은 새 이사장 부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투자는 의료원과 관계되어 쉽게 돈을 버는 사업들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원 돈을 갖고 가는 구조가 많긴 했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결국 2 가지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미래 투자와, 학교 기여 부분 사이의 균형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학교와 법인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

느냐, 혹은 할 수 있느냐가 걱정되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대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상황도 이해하고, 우리 상황도 있으니 점진적으로 법정 부담비율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이면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 향후 수입 창출을 계속 할 수 있을지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윤호섭: 본교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법인이 학교를 파트너로 생각하나요?

이재호, 이순일: 전입금을 줄 때는 그냥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일: 저는 법인의 선의만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잡았던 법정전입금도 추경에서 깎습니다. 돈이 없어서 깎는 것과 다릅니다. 얼마 준다고 비율을 정하고 나면, 실제 집행액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차액을 그대로 지급해 부담 비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을 줄여 예정된 비율만큼만 전입합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법인의 수익사업체가 장례식장, (주)대아, (주)대아시스템의 3 개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법인 수입이 늘었음에도 법정전입금 부담률이 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아 시스템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45%인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재단이 수입 증대에 따라 법정전입금을 늘렸다면 선의를 가졌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재단 수입이 늘면 법정전입금 부담률을 늘릴 것이라는 명시적 약속을 통해서 재정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한호: 그리고 본부 측에서 재단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없었습니다.

이순일: 이게 핵심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섭: 예를 들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각과 청와대 관계로 보입니다. 동등하게 상의하고 토의하는 관계가 아니라 명령을 집행하는 관계로 보입니다.

한호: 인문학적으로 보면 공감을 형성하여 함께 상의하고 토의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렇게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학교 쪽에서 시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순일: 이는 권력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 전입 도로의 경우 장례식장·본교·병원이 모두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건설비용도 부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건설비용 전부를 본교와 병원에 전가하였습니다. 법적 소송에 관한 비용 또한 모두 대학이 부담합니다. 소송 관련 서류들을 보면 소송 당사자는 모두 이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용은 대학이 지불합니다. 때로는 크지 않은 액수이지만,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를 총장에게도 알렸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 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적절하지 않은 차원을 넘어 불법의 소지가 큼니다. 법정전입금을 교비에서 부담하는 것도 관련 규칙 중의 예외 규정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나마 정규직의 경우에는 취약한 근거라도 있지만, 임시직의 경우에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임시직의 법정전입금을 교비에서 부담하는 행위에는 분명 위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단이 이를 고수하는 유일한 논거는 다른 학교들도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호: 이전에 다른 사람이 무단횡단한다고 해서 나도 무단횡단해도 된다는 생각은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대부분의 대학이 관행적으로 법정전입금에 대한 관념과 규정을 느슨하게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아마 수원대의 사건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일: 수원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순일: 지출 측면에서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구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등록금회계는 교육에 대한 직접적 경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법정전입금을 대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이 이외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양쪽에 다 잡히는 계정의 경우, 각 회계에서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유지보수비 등은 일부는 등록금 일부는 비등록금회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따르자면 이런 지출은 되도록 비등록금회계에서 많이 지출함으로써 등록금회계는 실험실습비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항목에 써야 할 것입니다. 직접 교육경비 지출을 우선하고 다른 용도 지출을 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다 포함되는 계정들이 4~6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등록금회계에 전가합니다. 비등록금회계에서 남는 자금은 적립이 가능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이재호: 적립할 수 있는 액수는 최대로 적립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산편성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순일: 그것도 충분히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감각상각비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등록금회계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최정주: 이것은 등록금회계에서도 유일하게 적립이 되는 것이나 현재는 여유가 없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일: 이전에는 건축비 적립을 최대치로 했었습니다. 만약 건물을 지을 돈이 없다면,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임대 공간을 교육·연구·행정 용도로 사용한다면 몇 년간 공간 수요 발생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건축적립금을 급하게 쌓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부족한 재원을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우선 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정주: 캠퍼스 플라자 이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조차 원칙이 없었습니다. 교육용 재산 중 일부 유휴 재산을 일정 부분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교육부가 세운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기존 제도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 과거의 행위에 대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감사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한쪽으로는 감사처분 이행의 의무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타 사업을 위해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양면이 있어서, 선후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감사처분을 해결한 후 캠퍼스 플라자를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캠퍼스 밖에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쓴다면 평생교육체제나 외국인 학생 교육 공간으로 쓰는 것은 타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공계열의 실험실 운영 등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순일: 이전에 행정부서가 그리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 대학의 경우에도 캠퍼스 밖에

행정부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비를 들여 캠퍼스플라자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 개축해서 나갔다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시 캠퍼스로 들어온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 내 공간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교비를 2중으로 써 가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 계획이 부재하다는 하나의 징표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정주: 오늘 교수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종합하고, 예산을 쳐다 봐야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를 구성하는 독립된 부서(책임운영부서, 단과대, 대학병원, 본부)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브랜드 가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뜻입니다. 학교가 좋아지는 것이 학교 구성원의 공통된 이익이며, 법인과 병원에도 이익입니다. 그 공통된 이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균형점을 찾는 것이 예산측면에서 보면, 법인과 병원, 학교의 의사결정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일: 지출과 관련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단과대학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현 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정주: 같은 의견입니다.

이순일: 지금 방식에서도 규모의 경제에 힘입어 예산 총액이 큰 단과대학은 운영의 묘를 발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절대액이 적은 작은 규모의 단과대학들은 운영상 여러 가지 곤란을 겪습니다. 일례로 단대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직접적 교육 경비는 대학 차원에서 일괄 지출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만 단대별로 자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식은 단대별로 교육환경도 차이가 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상합니다.

윤호섭: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학교에 부탁하실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순일: 등록금 수입 감소에 대한 경고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의 촉구에 미리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생

긴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학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공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획처장만이 아니라 교무위원 전원이 대학재정 및 예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는 분명히 지적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소속 상임위 활동에 더해 법안의 표결을 위해서는 모두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마련입니다. 교무위원들은 모두 대학운영의 책임을 내 댈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법인과의 대화에도 힘을 모아 적극 나서야 합니다. 11월은 본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기획처장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편성 작업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된 문제들을 관행의 명목 하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섭: 추후 기획처장님이 잘 인수인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처장님 한 분 또는 몇 분이서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재단이나 가능하면 학교에 지속적 문제 제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교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들은 ‘학교는 잘 돌아가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상황을 알려주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호: 다음 총장이 취임하시면 재정 건전성 개혁안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호: 이번에 이런 자리를 탁류청론에서 만들었지만 다음 번에는 대학 본부에서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과의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주: 동감합니다. 다만 대학 본부가 교수들과 이러한 사안을 공유하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안이나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와 함께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새 총장이 오면 1~2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검토한 후 교수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만 놓고 보면 상황을 정리하여 공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겨울방학 이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호섭: 잘 전달해 드리길 바라며,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주 교수님의 부가 의견입니다.

- 1)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CE사업은 떨어졌지만, CK-2사업은 6개 사업단이 선정되었고, 중간평가에서 2개 사업단이 탈락해서 현재 4개 사업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2) 기획처의 입장에서 위에서 언급한 비용문제를 면밀히 보자면, 현재는 간접비 계상 비율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후 간접비 계상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담론

대학생활에 대한 단상

사학과 김태승

대학의 위기

한 미래학자는 2030년까지 지구 상의 대학 가운데 절반이 사라지게 될 것(토마스 프레이)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지구적 수준에서만 아니라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위기를 실감하거나 위기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사실 대학교육의 위기에 대한 진단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세기 말 정보화 사회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당시까지의 산업화시대에 맞추어져있던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미 있어 왔다. 21세기에도 대학에서 얻는 지식보다도 대학 밖에서 얻는 지식이 훨씬 많고 또 기억의 지속성도 강하다는 “문화적 커리큘럼” 이론 등,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이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이 제한적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은 대학의 위기론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된다.

이처럼 “표준화”와 “대량생산”이 중심이었던 산업사회의 가치가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유효성을 상실해 가는 상황 속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과거의 명령에 간혀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학문융합을 시도하려는 노력도 학과 교육체제 앞에서 무력했다. 학과 교육체제는 대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대학교육을

지배해 왔고, 그러한 벽을 허물려는 시도들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대학은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는 생존논리의 경연장으로 전화했다. 기업은 교육과 현장요구의 “Mis-match”를 외치면서 대학교육 개혁을 소리 높여 요구해왔고, 자본의 논리에 장악당한 국가 교육정책 기구들은 그것에 발맞추어 대학교육을 압박해 왔다.

대학교육의 위기는 오늘날 AI 등장과 함께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0년 이후에는 운수업의 81.3%, 판매업의 81.1%, 금융/보험업의 78.9%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금년 초 두바이에서 개최된 한 회의에서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면 직업의 8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보다는 덜 비관적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도 현재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2016년의 다보스포럼 역시 그러한 상황을 경고하였다(5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소멸).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대학에 전가했던 ‘대학의 취업기관화 정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은 여전히 현실의 이익과 성과에 집착하여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Laissez faire”

이러한 대학의 위기에 대해 대학 쪽의 대응은 대부분, 대학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거기에는 대학에 개입하는 수많은 외부적 요인 가운데 특히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한 대학사회의 불만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국가가 대학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평가제도는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연구의 질적 문제를 ‘돈’의 문제로 바꾸어 놓는 탈맥락적, 프레임 바꾸기형 기획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그러한 평가는 대학교육 전체를 표준화하는 데는 유효할지 모르겠으나(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모방의 결과) 대학 자체의 독특한 개성과 그에 기반한 활력을 성장시키는 데는 무능했다.

게다가 국가정책은 결국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기고 그것을 “돈”의 경쟁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학은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보다는 다른 대학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데 몰입하게 되었다. 학부모/학생들은 취업 등에서 유리한 “명문대”를 선호하고 명문대들은 자원을 사실상 독점함으로써 경쟁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해 나가려 했다. 그러한 현실을 대학내부의 교수사회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현존하는 대학의 위기가 사회구조적 상황에서 파생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윤리적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개별 교수들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노력에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의 위기는 대부분의 경우 “내로남불”로 인식되었다. “자유방임”은 그것을 향유하는 주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오늘날의 대학 교수사회의 현실 속에서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교수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사회학자임은 물론 제도 역사가가 되어야 한다.”는 한 미국교수의 지적은 음미할 가치가 있다.

꿈을 꿀 수 있는 대학, 혹은 행복한 대학

대학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거나 실현하는 장이라기보다는 이익을 위한 경연장으로 변화하였다. 학생들은 점수 1점에 목을 매고, 교수들은 평가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현실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끊임없이 이벤트를 기획하고, 겸손하기보다

는 자신을 과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러한 욕망이 경쟁하는 무대에서, 그 누가 행복을 꿈꿀 수 있는지 모르겠다.

대학교육은 욕망추구의 도구라기보다는 그래서 욕망의 노예를 육성하기보다는 욕망에서 자유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그래서 주체로서의 인간을 자각하도록 격려하는 무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대학생활의 막바지에 이른 나는 오늘도 버려야 할 책을 치우면서도 어느 시인처럼 “버려질 책”을 쓸 수 있기를 욕망한다.

이 세상에 미술 작품은 얼마나 많은가. 더 이상 전시할 공간이 없을 정도다. 전시실 밖에 걸어 놓아야 한다. 책은 또 얼마나 많은가. 큰 책, 작은 책 (중략) 이렇게 수많은 책을 모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책을 먹을 수 있다면 왕성한 식욕으로 샐러드를 만들거나 양념을 곁들여 요리를 할 텐데. (중략) 대낮에 광장에서 읽는 시가 되어야 한다. 책이란 술한 사람들의 손길에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져야 한다. 그런데 시인을 위한 시집출판은 나를 자극하거나 유혹하거나 도발하지도 못한다. 그럴 바에는 출판사고 책이고 모두 버리고 파도나 바위와 같은 자연 속에 파묻히고 싶다.

(파블로 네루다, 『자서전』의 「시」에서)

그리고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음을 직시하고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세워 용기있게 자신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꾼다. 우리 대학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마당의 구부러진 나무가

토질이 나쁜 땅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으레 나무를

못생겼다 욕한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김광규 역,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교수들의
건강칼럼

잠복결핵의 진단과 치료가 가지는 보건학적 · 사회적 의미

의학과 호흡기내과학교실 신 승 수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몸 안에 살아있는 결핵균이 소수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결핵균을 남에게 옮기지도 않는 상태에 놓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핵균이 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균을 발견함으로써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검사방법인 결핵피부반응검사나 결핵균 특이적인 인터페론 감마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동성결핵, 즉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전제된다는 점입니다. 결핵균이 몸 안에 있다는 면역학적 근거는 있는 반면 활동성결핵은 없다는 임상적 근거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잠복결핵을 본격적인 치료대상으로 삼기보다는 활동성결핵으로 이환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반면, 현재는 잠복결핵 또한 치료해야 하는 결핵의 범주 안에 넣고 ‘치료’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 대비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활동성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던 이전에는 잠복결핵은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의 대상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슷한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에 있는 다른 나라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결핵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핵으로 이환하는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핵관리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잠복결핵이 결핵관리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면역학적 검사방법을 이용해 추정한 잠복결핵 검사 양성자의 수는 전체 인구 대비 약 1/4에서 1/3에 달합니다. 물론 이들이 다 실제 잠복결핵 이환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중의 일부라 추정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잠복결핵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잠복결핵은 일종의 균과 인간숙주의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이 유지된다면 결국 결핵균은 사멸하거나 적어도 활동성결핵으로 이환하지 않은 채

평생을 지내게 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결핵균은 증식하여 활동성결핵으로 변하게 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대신 고유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이런저런 만성질환 상태에 놓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잠복결핵이 활동성결핵으로 변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보통 잠복결핵이 있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단 한번이라도 활동성결핵으로 변화하는 확률은 대략 1/10 정도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이가 들고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확률은 더 높아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은 더 낮을 것입니다.

잠복결핵의 치료는 활동성결핵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약을 이용해 투여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약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이며 이소니아지드 한 가지만 투여시 9개월, 리팜핀 한 가지만 투여시 4개월, 이 두 가지 약을 함께 투여시 3개월이 표준 치료기간입니다. 보다 시피 단기간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고 두 가지 약 모두 적지 않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가진 약들이라 치료결정은 신중히 해야 하고 치료 중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잠복결핵에 걸려 있어도 실제 활동성결핵으로 옮겨갈 확률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의 치료는 이를 감안해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면역억제상태에 있는 사람, 즉 에이즈에 걸려있거나 장기이식 같은 이유로 계속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대상자가 됩니다. 이외에 암에 걸려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투석을 필요로 하는 신부전 상태에 놓은 사람들도 대표적인 치료의 대상자가 됩니다. 추가로 최근 활동성결핵이 발병이 확인된 집단(학교, 부대, 거주시설, 요양시설 등)내에서 발견된 잠복결핵도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본인의 면역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다수의 결핵 환자를 접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와 계속 접촉하는 의료종사자 중 최근에 잠복결핵을 진단받았으면 의료종사자 자신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잠복결핵에 대한 관심과 치료시도의 증가는 또 다른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스스로 느끼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은 상태에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결핵약을 최소 3개월, 최대 9개월을 먹도록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고 적지 않은 중도 포기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약을 먹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실제 활동성결핵의 발병은 막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처음에 먹었던 결핵약에 내성만 증가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높아진 결핵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아직껏 빈곤한 가용 결핵약의 종류는 이런 걱정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대상자의 선정, 충분한 동기부여, 치료기간에 걸친 직간접적 지원 등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결핵관리사업의 잠복결핵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의 높은 결핵부담을 의미 있게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식

교수회 소식

제85, 86, 87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지난 9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율곡관 204호 제1회의실에서 제85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16대 총장선거위원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 및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16대 총장선거위원회 구성 및 교수대표 추천 관련 사항과 총장선거위원회 활동, 총장선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교수회의 입장 표명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율곡관 354호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제86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분과위원회 조직, 총장선거위원회 진행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총장선거위원회와 관련한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 구성 및 교원 복지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율곡관 204호 제1회의실에서 제87차 월례 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타 대학 진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 및 총장선거위원회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논의사항으로 2017학년도 교수회 총회 준비, 대학평의원회 예,결산안 심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교수회에서는 매 학기 월례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